

국립 현대미술관 분관 광주유치 가능성 부상 입지선정 논의도 활발

광주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하자는 광주시와 지역미술계의 주장이 대선 국면을 맞아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입지를 둘러싼 논란이 무성하다.

강운태 시장은 12일 간부회의에서 “전당내에 지역 문화예술계의 속원인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분관을 유치토록 하겠다”며 “전당 인근에 미술관 분관을 별도로 짓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여러모로 전당 내 설치가 바람직 하며 민주통합당 문제인 대선 후보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8

대선국면 ‘공약화’ 움직임

광주시 “亞전당내에 설치”

미술계 “전당밖 구도심”

일 간부회의에서도 “현재 전당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 넣을 콘텐츠가 없다는 게 큰 문제”라면서 “문화전당내 창작공간인 제 1전시실(940평)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유치한다면 매번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해야하는 고민도 다소나마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시아문화개발원 이영철 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문화전당 내에 채울 콘텐츠를 사이에 국립현대미술관을 끼워넣는 생각 자체가 난센스”라며 “마치 청국장에 와사비(고추냉이)를 섞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문화전당은 과거·현재·미래의 개념을 깨트리는, 즉 시공간을 뛰워는 비(非) 서구적 접근 방식의 콘텐츠가 다양한

예술품들과 뒤섞이는 기준 예술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체워지게 될 것”이라며 “문화전당에 들어서면 마치 예술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짜릿한 느낌을 줘야 하는데, 갑자기 현대 서구미술의 상징인 미술관이 그 사이에 놓인다면 전 세계 예술인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미술계 인사들이 중심이 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유치를 위한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태)도 광주시의 국립현대미술관 유치에 대해서는 적극 반기면서도 입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전당 내 설치보다 몇 년 전 논의됐던 광주 중앙초등학교 부지나 인근 건물을 리모델링해 구도심 및 전당 활성화와 서로

연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입지를 놀라싼 지역내 의견 조율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입지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마련한 뒤 분관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논리를 개발하고 점부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유치 운동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국립광주 현대미술관 유치를 위한 미술인 공청회’에서 김승환 조선대 교수는 “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위해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독특한 타이틀의 색깔이 있어야 한다”면서 “유치 당위성을 견고한 보다 섬세하고 치밀한 논리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정부, 영광원전 방사능 누출 대책 세워라

전남도 탈출도로 개설 등 건의…현장 온 흥장관 “안전 없이 가동 없다”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만약, 방사능이 누출된다면 발전소 반경 10km 내 주민 1만4900여명의 탈출로는 법성~홍농간 국지도 하나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영광원전 3·5·

6호기 가동중단과 관련,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순히 문제가 발생한 부품을 교체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아예 근본적인 안전망을 갖추자는 것이다. <관련기사 2·6면>

박준영 전남지사는 12일 도청 서재

필실에서 실국장 토론회를 갖고 “영

광원전 3개 기가 동시에 멈춰선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며 “영광원전에서 사고 발생 시 우리나라 내륙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만연을 대비 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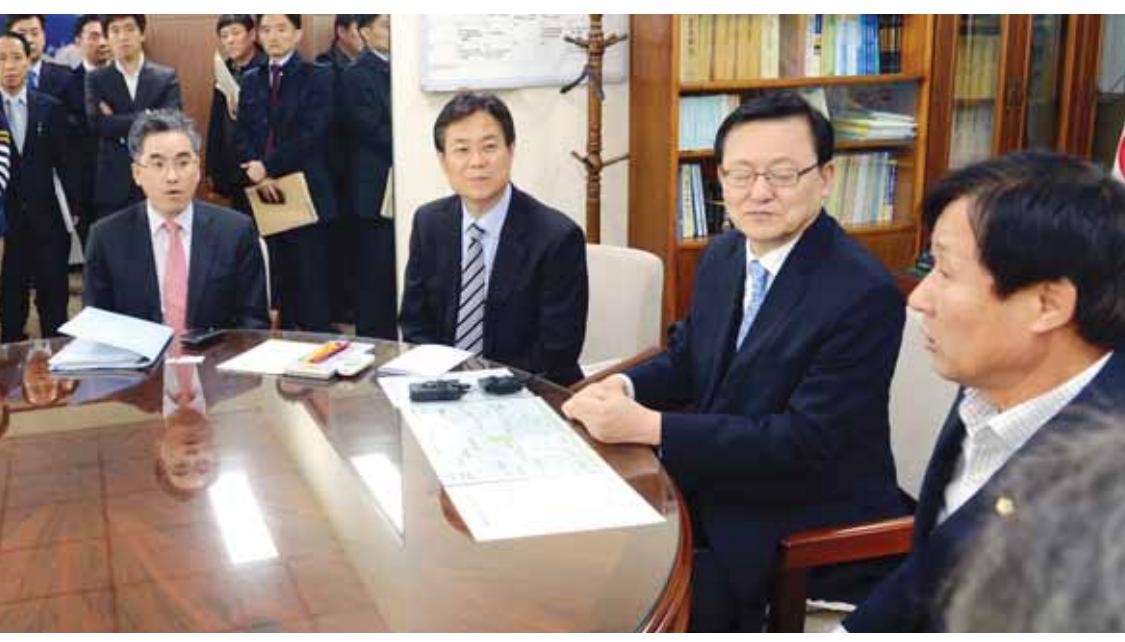
전남도가 마련한 정부 건의안은 크게 ▲원전 안전대책 ▲비상도로 4차선 (탈출로) 신설(600여원 예산)

▲원전 주변 주민 이주 대책 ▲서남권 원자력의원화 설립 ▲방사능 방제 대책 등이다.

정부는 그동안 영광원전 관련 시설에만 집중투자하고, 원전 주변 도로 등 SOC 투자에는 인색해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제대로 탈출하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 비상상황 대비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흥장관은 이어 “그동안 당국과 주민들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원전 부품 하나하나 교체하는 것까지 상세하게 공개하겠다. 전기가 부족하다고 해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발전소를 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에 수차례 정부에 원전 법성~홍농간 4차선 신선으로 견해해 줄 것을 건의해 왔으나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주변 인구의 노령화도 심각해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도 대수술이 요구되고 있다.

영광군도 12일 주민의견 수렴과 영광을 찾은 흥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영광군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나승만 의장(맨 오른쪽)의 영광원전 5·6호기 가동 중단과 3호기 제어봉 안내관 균열에 대한 대책 요구에 은행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영광=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2일 영광을 찾은 흥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영광군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나승만 의장(맨 오른쪽)의 영광원전 5·6호기 가동 중단과 3호기 제어봉 안내관 균열에 대한 대책 요구에 은행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영광=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영광원전 3호기 균열 용접해서 쓴다고?

부품 교체 2~3년 걸려 임시방편 가동…안전성 의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영광 원전 3호기의 핵심 부품에서 발생한 균열을 용접으로 수리하기로 결정했으나 임시방편적 처리여서 주민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재가동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같은 수리방법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전문가들조차 이 방법이 안전한 것인지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이날 영광을 방문한 흥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5·6호기에 이어 3호기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재가동 여부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재가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결정될 문제

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수원 측은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해 가동이 중단됐던 영광 5·6호기 가운데 5호기를 이르면 다음 달 초 재가동할 계획이다. 교체에 필요한 부품이 오는 25일부터 입고될 예정인 가운데 한 기라도 먼저 재가동하기 위해 영광 5호기부터 교체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신 대 학 교

2013학년도 학부 수시 2차

■원서접수: 11. 12(월)~16(금)

2013학년도 대학원

■원서접수: 11. 12(월)~30(금)

입학 학 부 062)605-1114

문의 대학원 062)605-1115

알림

광주일보 신춘문예 공모

단편소설·시·동화…12월 15일 마감

광주일보사 한국 문단의 새 주역이 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광주일보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부터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돼왔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치열한 문학정신이 살아있는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부문 및 상금

단편소설: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300만원)

시: 3~5편(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동화: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접수마감: 2012년 12월 15일(15일자 소인 유효)

■보내실곳: 우편번호 501-71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생활부(문의 062-220-0643)

■기타

–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원고 접수 시 전화번호·주소·e메일 주소를 함께 보내주십시오.

– 응모작품은 발표된 적이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출판된 원고나 기성 작품의 표절일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 당선작은 2013년 1월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합니다.

광신 대학교



당신은 카피캣?

“뉴스 무단 사용은 이제 그만!”

뉴스도 저작권법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 모르셨나요?

내용은 손쉽게 카피할 수 있어도,

저작자의 땀과 열정까지 카피할 수는 없습니다.